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 청렴 분야 공약 비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겨울이 아닌 봄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장미대선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갖게 되었지만, 조기 실시 이유는 그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인 결정, 게다가 파면의 이유는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헌정질서유린에 있었다. 일반적인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부패 문제는 필수적인 요소처럼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의 사유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와 직권남용, 강요와 함께 뇌물혐의로,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엄벌과 적폐청산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과 그 정부는 단순히 지난 박근혜정부에 의해 만신창이된 국가시스템을 복원하는 수준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폐 청산 과정을 겪지 않은 채로 굶아왔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

주요 후보들의 반부패 공약을 다음의 주제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와 적폐청산 의지
2. 정치개혁
3. 반부패관련 법률
4. 재벌개혁
5. 기타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와 적폐청산 의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속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국가의 부패정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부패 인식지수가 수년 동안 10점 만점에 5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의 수립 이행을 해야 할 국가기관이 축소되고, 대통령이 직접 관계기구간 회의를 주관하던 관계기관 협의회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다.

반부패운동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의 복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기구의 존재여부가 우리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두 정부에서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 국가아젠다에서 반부패청렴이 차지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부패인식지수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PI	5.6	5.5	5.4	5.4*	56**	55	55	56	53
순위	40	39	39	43	45	46	43	37	52
조사대상	180	180	178	183	176	177	175	168	176

*10점만점, **100점만점

국제투명성기구, <http://transparency.org>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를 갖추는 것과 함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 공직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실행할 수 있는 회의체계의 복원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반부패기구가 다른 기관과 통합되면서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회의가 중단되었다. 하나의 담당부처에서만 정책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부패방지 정책방향과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기관 간 협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반부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에 그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운 공약들이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이하 더민주당)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때 어떤 것에 가장 시급하게 중요성을 두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 판단해볼 때, 다른 후보들보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장 많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 기구에 대한 언급은 더민주당이 유일하다.

더민주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 마련을 적폐청산의 두 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는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하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익이란 이름 뒤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더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하 정의당) 공약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 5대 근본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재벌개혁 부문에서, 최순실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부당이익 등 범죄수익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부패범죄를 환수했다는 특히 그 재산이 국외에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환수에 대한 정부조치나 결과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한 것 같다. 유력한 대선후보는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4대강, 자원외교 등 지난 정부의 부정축재에 대한 환수를 약속했으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의 환수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벌로서 상식적인 일이며 적폐청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더민주당은 위법한 재무회계상 행위에 대한 손해예방과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 제도도입을, 정의당은 재정낭비방지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민주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도 추진한다. 나아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두 번째로, 정치개혁 중 검찰 등 사정기관 개혁 공약을 검토한다.

권력형 비리의 총합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었으나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으며, 특검 종료후 검찰의 수사 역시 뿌리깊게 자리한 부패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분야 부패범죄를 다룰 때,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실무진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 비해, 정책의 입안자, 명령권자들에 대한 느슨한 법 적용에서 비롯된다. 사안별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권력 앞에 약한 검찰에 대한 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다룰 독립기구의 설치를 대부분 후보가 공약했다.

검찰개혁

고위직의 비리범죄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과 엄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섯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더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시하였으며, 5당 모두,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각 당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고,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한다. 또한, 검찰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 구성과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도 공약했으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검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 강화 방안으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서 상호 감시체계화하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검찰개혁 내용으로 검찰총장 임명요건을 강화하고, 정치검사에 대한 문책도 공약했다.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인권감찰관 신설 공약이 있는데, 일반수사업무와 독립하여 인권, 감찰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감찰을 통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에 국민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검사로만 임명하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일반직 및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를 추진한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헌법개정으로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게 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바른정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하였다. 또, 전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제한을 공약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선임행정관 이하로 제한하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사 파견은 금지한다.

정의당은 특정범죄 및 피해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도록 하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청장이 소속 검사 인사 및 운영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독립 기구 신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가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바른정당의 공약내용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 공수처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국회가 특검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하는 감시,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정의당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기관이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책이 아닌, 대통령 주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감찰대상을 권력밀착형 사익추구 민간인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에게는 감찰의 결과만 보고하여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경간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기소권과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정치검찰 척결 및 개혁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수사청 별도 설치 : 기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특정범죄 및 피해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 구성,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헌법 개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점진적 축소	전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등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
검찰의 외부 견제가 강화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내부비리근절을위 한인권감찰관신설	기소배심원제 도입: 권력형 사건기소 여부 결정시 국민배심원제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접 선거, 선출된 지방검찰청장에게

기소법정주의 도입,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 위한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도입, 권력형 비리 불기소 남용 방지		소속 검사 인사 및 운영권 부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공약				
신설		신설	설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담	-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수사와 기소권한 통합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원칙적 금지	국회가 특검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 견제장치 마련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감사원

주요 사정기관의 하나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모든 당에서 제시하였다.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을 헌법개정 후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거나(자유한국당), 회계검사권을 국회(또는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기관)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직무감찰기능만 두는 등 권한조정을 하고(더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더민주당, 정의당) 공약을 제시했다. 감사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더민주당), 감사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정의당) 공약도 있다.

감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제시한 더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후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위원회 의결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이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 사항도 보고하고, 특히 감사대상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시켜 감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경제환경과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한 공약도 대부분의 당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 자유롭게 고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권한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를 개혁하고(더민주당), 상임위원 증원과 임기연장으로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하고자 하고(국민의당), 심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공정위의 전면개혁을 내세운(바른정당) 공약도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제 기관을 확대 강화하고, 사인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감사원				
감사원 독립성강화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감사원 대통령직속기관에서 독립기구화(헌법 및 특별감찰관법 개정추진)			
회계검사권 국회이관,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 설치,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에 두고,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	감사원 국회 이관, 권한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감사원 전문성 강화 :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역할 강화				직무감찰 폐지하고 성과감사 중심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법집행역량 강화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	독립성강화와 역할 재정립	공정위 전면 개혁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제한적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세 번째,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공약

공익신고자보호법

대통령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은 사회의 문제를 걸러내야 할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시민들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비판도 감수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자신도 그 안에서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서’라는 식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고 제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더욱 넓어진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공익신고의 대상, 신고자 신분 보호 등 미비점이 드러났으므로, 이번 대선에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세 곳에서 공익신고자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특히,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하여, 신고대상 범위 확대, 익명신고 가능, 포상금 액수 상향 조정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고발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제도를 재편하겠다는 정책을 내어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정의당의 관련분야 공약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제도와 보호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내용과 아동학대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확대 적용을 포함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

반부패 관련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9월 발효된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내용은 주로, 법시행으로 거래가 줄어들어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축수임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마련(바른정당)이나, 아예 농축수임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도 조정하겠다는 공약(자유한국당),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한 공공조달확대,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정의당)를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해당 법률에서 직무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부분이 배제되어 부정부패 근절에 실패했다는 진단하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공약했다.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 적용을 폐지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두고 예외사유를 적용하는 등 법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공약에 포함하였는데, 공직자는 취임 시 뿐만 아니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각 부처 이해관계충돌 심사관을 도입하여, 처리내용 조사 및 위반행위 발견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이해충돌방지 법제 마련을 공약하였으며,

더민주당은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하고,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를 공약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근절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과학기술분야 내부고발자 제도와 보호정책 마련
공직윤리강화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아동학대신고자에게 법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기준을 10,10,5로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임산업 지원대책 마련		청탁금지법 강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 적용 폐지, 처벌조항 강화(중징계 및 징벌적 몰수제도 도입)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확대,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이해충돌방지 관련				
공직윤리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이해충돌방지 법제 마련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정치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국회의원과 관련한 공약사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또는 도입 검토는 모든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폐지도 공약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또는 폐지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는데,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과 일치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에 따른 공약으로 보이나,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할 위험도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공약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윤리심사강화를, 국민의당은 국회윤리위원회에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윤리위 제소권을 부여하고, 심사에 국민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윤리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더민주당의 경우,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출신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를 금지하고, 상임위 안건 심사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심사는 회피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자금제도 투명성강화를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공개를 공약하고(더민주당), 기부자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 내역 상시 공개, 정당회계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국민의당).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한 공약을 냈다. 국민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정의당은 예결산특위와 계수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제시했다. 입법부 관련한 공약으로 정의당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속한 정당은 해당선거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비용 50%부담 법제화를 제안하고, 증액예산요청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여, 예산통과에 쪽지예산근절을 제시했고, 더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정당의 후보 무공천을 제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윤리위원회에 국민참여 보장 : 윤리위 제소권 부여, 윤리위 심사 국민배심제 도입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폐지, 독립적 국민 참여 윤리기구 신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정당 후원회 제도 정비,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공		기부자신원, 기부액 인터넷 상시 공개, 정치후원금 지출 내역 상시 공개, 정당 회계 완전 공개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해당선거 무공천 제도화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부담 법제화

네 번째, 재벌개혁

정경유착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은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 분야의 다양한 공약사항 못지않게 재벌개혁,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독단적 경영전형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으로, 대주주 지배력강화 차단방안 마련(더민주당), 일감몰아주기 근절(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독단적 경영전형 방지(자유한국당), 순환출자 유예 기간 두고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정의당) 등이다.

정당한 기업활동이 아닌, 부당한 방법과 범죄행위로 인한 사후조치에 대한 공약으로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처벌 및 사면권제한과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더민주당), 기업범죄형량 강화,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제한, 불법행위자 회사경영참여 금지, 경제관련 범죄자 이사선임 제한(국민의당),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바른정당),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정의당) 하였다.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다섯 개 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민주당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 설치, 자유한국당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은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화, 회계시장 투명성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CEO승계프로그램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를 공약하였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등을 제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를 반영하는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약은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제시하였는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 및 자본시장법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 등을 법제화하고,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관련 정보 공개(더민주당),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적기구화(자유한국당), 스튜어드코드 채택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지침마련(국민의당), 연기금 의결권행사지침 법제화(정의당) 하겠다는 내용이다.

재벌개혁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대기업 독단적 경영전횡 방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기업범죄의 형량강화,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합
재벌의 증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불법행위자 회사경영 참여 금지 : 경제관련 범죄자의 이사 선임 제한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자본적정성 규제 등,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화, CEO승계프로그램 마련 및 승계절차공시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축소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배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일반집단소송제 도입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관련 정보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적 기구화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지침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그밖에,

국가정보의 투명성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공약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여 공기업인사 투명화와 공기업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겸임금지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대통령 인사시스템 투명화를 위한 인사추천실명제 시행,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단체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 실시를, 정의당은 대규모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민주당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강화를 공약하였고, 국민의당은 정부와 기업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공공입찰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관련한 비리에 대한 대책은 서로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정의당은 제외한 4개 당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격제한 강화,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 상향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이 그 내용이다.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함께,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민간 참여로 외부 견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다른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을 제도화하고,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가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방산비리를 부정부패의 관점이 아닌 국가안보 측면에서 진단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방부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 및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신설해 국방개혁 분야 지휘·감독 강화하고자 한다. 국방청령법을 제정하고, 국방예산 사용결과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된다.

바른정당은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무기도입관련 비리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사법개혁의 대표적인 대상인 전관예우 문제의 경우,

국민의당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직 공직자 처벌 강화를,

정의당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위반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및 양형과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의무 강화 등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사학비리에 대한 공약으로,

더민주당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를 제시했으며, 입시·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입시 정착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당은 자율성은 보장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약했으며,

정의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임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정이사 추천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기했고, 사학 교원임용 채용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고, 사학 채용비리에 징벌적 조치를 강화해서 친인척취업특혜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국가정보의 투명성				
공기업: 감사독립성 등 경여책임성 확보, 노동자이사제도입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혁신위원회 :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 국회에 부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와 기업간 담합행위 근절 : 공공입찰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한 관계담합 행위 처벌 근거 마련		
대통령 인사시스템 투명화 : 인사추천실명제 시행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대규모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방위사업 비리/전관예우/사학비리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국방부내 방위사업 비리 감시팀 신설, 처벌 강화 근거 마련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신설	무기도입관련 비리 척결	
		현직 공직자 처벌 강화 하여 전관예우 근절		전관예우 위반 변호사, 형사처벌 조항 신설 연고관계 선전금지의무 강화 등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 이사파견 요건 확대		자율성보장과 사학재단 비리 근절 : 정부지원체계 개선		사립학교 교원임용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